

오락가락 접종계획에 고령자 “백신거부”… AZ 불신 확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AZ백신 추가임상 결과 4월 공개
고령자에 효과 없다면 ‘계획무산’
예방 확인되면 ‘골라맞기 불가능’

“상황보며 안전 입증때 접종고려”
“부작용 보다 사망률 먼저 줄여야
고령층 일수록 백신 맞는게 안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 계획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으며 노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한차례 중단됐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이 없는 탓이다. 전문가들 역시 노인들에게 mRNA 백신이 더 안전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정부가 방침을 바꾸지 않는 한 국내에서 백신을 골라맞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백신 맞느니 ‘집콕’하며 버티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신청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AZ)코비드-19백신주’ 78만7000여명분을 국내 처음으로 국가출하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AZ 백신의 고령자 접종이 보류된 상황이어서 오는 26일부터 전국의 요양병원·시설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첫 접종이 시작된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간호협회 취업인력교육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혼합(빈병)이 공개되고 있다. /뉴스스

의료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빨라도 4월 말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진행중인 AZ 백신 추가 임상 결과가 4월 중순 경이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만일 추가 임상 결과, 고령자에 백신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면 접종 계획은 무산된다.

노인들과 가족들의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 접종에 대한 불확실성도 문제지만, 정부와 백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데 따른 공포감이 더 크다.

서울 잠원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72세)는 “유럽에서 이미 고령자 접종을 막았는데, 한국은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 고령자에 대한 AZ 백신 접종 계획을 버

젓이 내놓은 것 아니냐”며 “미리 백신 확보를 못한 정부의 무능함에 왜 노인들이 피해를 입어야하는지 모르겠다. 이젠 무섭기까지 하다”고 토로했다.

AZ 백신의 최종 결과와 상관없이 맞지 않겠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치매 노모를 요양병원에 모신 장 모씨(54세)는 “AZ 백신 효과가 얼마나 높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접종을 거부할 것”이라며 “이미 한번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선뜻 동의할 자식이 어디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백신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확산되는 추세다.

서울 서초동에 거주하는 박 모씨(74세)는 “이제까지 집 안에서 건강히

지내왔는데 1년 더 버티는건 문제도 아니다”며 “국내 접종 상황을 다 지켜본 후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AZ 백신 외엔 대안이 없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에게 바이러스 베타(AZ·얀센)백신보다 mRNA 백신(화이자·모더나)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볼 때 접종 후 몸살 등 부작용 발생이 바이러스 베타 백신보다 mRNA 백신에서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안전성과 변이에 대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인들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는 것이 아무래도 안전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저온 냉동 보관이 필요한 mRNA 백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바백스 백신을 최적의 대안으로 꼽고 있다. 노바백스 백신은 냉장(2~8도) 보관·유통이 가능하고, 오랜 시간 인플루엔자(독감), B형 간염 등으로 사용돼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전일 고령자에 대한 AZ 백신 접종이 어려울 경우, 다른 백신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대안을 찾긴 어려울 전망이다. 화이자 백신 50만명분의 도입 일정이 3월 말로 당겨졌지만 보관과 유통의 제

약이 큰 탓이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에서 보관, 유통하고, 접종 전 해동을 하고 생리식염수로 희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들고 요양 병원을 방문해 투약하기엔 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화이자 백신 물량은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균무하는 의료진에 투여될 가능성이 높다.

노바백스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생산해 2분기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임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기를 단정짓진 이르다.

더욱 결정적인 문제도 남아있다. 정부가 전국민 무료접종 계획을 번복하지 않는 이상, 국내에선 누구도 코로나19 백신을 골라맞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AZ 백신의 추가 임상 결과, 고령자 예방 효과가 확인된다면 요양병원 고령자들은 꼼짝없이 AZ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투여를 거듭 권했다.

천 교수는 “이스라엘 사례를 보더라도, 백신을 접종한 70대 이상 발병률이 크게 떨어졌고, 오히려 40대 이상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작용보다 사망률을 줄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고령층 일수록 무조건 백신을 맞는 편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개인 공매도 대여물량 충분히 확보”

은성수 금융위원장 “물량 2조~3조 개인-기관·외국인과 형평성 맞출 것”

“개인에 대한 주식대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늘려나가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고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에 한해 부분 재개하기로 했다. 주식대여서비스를 통해 빌려줄 수 있는 주식물량을 2조~3조원 정도로 확보해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주식대여서비스는 투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을 증권사에 빌려주면, 증권사는 주식이 필요한 차입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제도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적된 부분은 주식대여서비스의 상환기간과 증거금 비율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주식대여시 상환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식대여시 상환기간은 60일이다. 기관 외국인이 공매도시 상환기간에 제한이 없는 것과 대비된다는 설명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기관·외국인은 공매도시 상환기간이 무제한이지만 개인의 경우 주식대여시 상환기간이 60일로 제한돼 있다”며 “시간제약을 받은 개인이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전체 주식대여서비스 물량이 3조원인데, 한명이 1년을 빌리면 나머지 분들이 (공매도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상환시기를 줄여 많은 개인투자자에 기회를 부여한 측면도 있다”며 “주식대여 상환기간과 공매도 증거금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하겠나”고 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스

기한은 없지만 빌려주는 이가 리콜하면 내일이라도 갚아야 한다”며 “개인은 오히려 60일까지 리콜을 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딜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투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제도개선으로 형평성 문제를 해결에 달라는 것”이라며 “개인투자의 상환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하거나 기한만료시 1회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공매도 증거금과 관련해 “개인투자자 40%, 기관·외국인 5%로 제한한 것 또한 지나친 차별”이라며 “개인투자자 공매도시 증거금을 20~30%로 낮춰 공매도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전체 주식대여서비스 물량이 3조원인데, 한명이 1년을 빌리면 나머지 분들이 (공매도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상환시기를 줄여 많은 개인투자자에 기회를 부여한 측면도 있다”며 “주식대여 상환기간과 공매도 증거금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하겠나”고 답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후보지 2분기 발표”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점검회의
“시장심리 안정 위해 구체화 관건
2025년까지 총 205만가구 공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스

개선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19 대책은 상반기 종목 표 공급물량(전국 4만9000가구·서울 5000가구)이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진력하되 11·19 대책 관련 신규 매입약정 전용 사업자 대출 보증 신설 등 제도개선도 3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4 대책과 기 발표 물량을 합산할 경우 2025년까지 205만가구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며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공급대책을 반드시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금보상 원칙, 부동산 교란 행위 억制처벌

홍 부총리는 또 사업예정구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을 두고 나오는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며 감정 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 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우려에 대해선 “기존 조합방식의 재건축·재정비사업 트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익률 가산 및 각종 규제, 부담의 면제·완화 혜택을 더 제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제시한 것인 만큼 토지주·조합 등의 의사반영 또는 선택 폭을 더 넓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조합은 우선 공급 약정 계약이전에 희망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직접 선정해 통지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근 빈번히 발생했던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이 집중 점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홍 부총리는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불법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 상시조사 등을 진행 중에 있다”며 “그 결과 2021년 중 현재까지 총 86건, 409명을 단속해 18건, 42명을 기소 송치하고 탈세 혐의자 5872명에 대한 세무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연우 기자 yw964@